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사전 설문 결과

설문기간 : 2017. 8. 3. ~ 11(12:00). 최종 (26명 참여)

1.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리더십과 역할

-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
- 기록관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여 그에 맞는 답을 내고 해결 할 수 있는 추진력있는 리더십
- 전문성을 발휘하고 기록원 내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함. 영전하는 자리, 쉬다 가는 자리가 더 이상은 아님. 당연하지만 전문성 못지 않게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기대치가 없음)
- 정부와 국민의 신뢰 회복, 기록공동체의 신뢰 회복, 기록/대통령기록 법제 정비,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체계 수립
- 1.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2. 국가기록원의 질적, 양적 확대
- 어떠한 정치적 외압과 간섭도 견딜 수 있는 굳건함과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소통 능력
- 기록연구직에 대한 역할 재정립, 공공기관 기록연구직 소통 활성화, 기록물 업무의 내실화 등
- 관료보다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일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관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국가기록원은 아카이브보다는 행정부 아래의 평범한 기관 같았습니다. 전문성은 선언이 아니라 국가기록원(기록공동체) 바깥에서 인정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쏠렸던 시소의 균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다른 한쪽에 힘을 많이 실어줘야 합니다.
-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와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며, 권위적이기 보다는 상호 협력적이고, 기록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리더십
- 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원으로써의 '국가기록원'의 위상정립(행정부서의 일개 일원으로서의 탈피와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 각 지방 및 민간기록관들을 지원하고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
- 국가기록원의 근본적인 변화와 기록원을 벗어난 기록공동체와 소통의 리더십
-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함.
- 실질적인 기록물 생산 기관인 각 공공기관의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기록의 가장 밑바탕이 기록물 생산 기관임. 이러한 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기록관의 실패로 직결됨. 현재 공공기관내 독립적인 기록물관리부서가 만들어 지지 않음.

- 기록관리 현장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열악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법제화를 이루어 기록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
- 국가기록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추진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제1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수행해야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기록관리 도전과제를 받아 안으면서도, 기존의 업무영역에 통합하여 성공적인 업무 절차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기록전문가집단과 민간기록종사자들과의 수평적 소통
- 자신의 업적을 위한 보여주기신 행정이 아닌 정말 기록물 관리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행정 필요
- 현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물론 기록관리학 분야까지 공멸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1. 전문직의 역할과 사명을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는 연구직(사서직 포함)에게 인식시키고 이에 맞는 업무 수행(정기적인 연구 실적 쌓기, 업무계획서 작성 등)을 요구해야 함. 2. 또한, 국가기록원 내 업무 지원과 수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직(행정지원, 계약 수행 등)과 연구직의 업무 분장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3. 향후 국가기록원이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직이 인사, 재정 등의 행정 업무 수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 4. 5급 이상(연구관, 사무관 등)의 실무적 감각 상실을 막기 위한 주기적인 실무 현장 배치, 5급 승진시 일정 기간의 실무경험 가산점 반영, 중간 관리자 이상의 정기적인 업무 교육, 타 기관 파견 등으로 실무자와 관리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5. 6급 이하(연구사, 주사 등) 주무관들의 현장 업무 감각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업무 협의와 토론회, 각 기관의 연구사 간에 업무 교류 기회 확대 필요. 6. 연구직들의 행정 및 정무적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업무 교육 실시, 행정부서 업무 배정 필요. 7. 유사 기관(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도서관, 박물관, 기타 기록 및 문화유산 관리 기관)과의 업무 교류를 통한 입체적인 업무 능력 배양 기회 확대. 8. 기록연구사(관), 학예연구사(관) 간의 배척점(예 : 기록연구직들은 역사를 모른다, 학예연구직들은 기록관리를 모르면서 기록연구직들을 무시한다, 사서직들은 승진만 관심 있다 등) 해소를 위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업무 분장 및 팀 구성 필요. 9. 연구관들의 권위의식과 연구사들의 패배의식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필요(예 : 기록연구사는 법령에서 전문요원 명칭을 삭제하고 연구직으로 통칭 명시, 기록물 이관 업무 수행에 대한 의무기간 경과 후 연구관 승진, 연구관 10년차의 타 기관 파견, 연구관의 고유업무 배정 등)
-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원 구성원 대부분은 참 열심히 일을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관리실무자들은 기록원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록원과 기록관 종사

자들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RMS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국가기록원이 기록관 종사자들의 문제의식을 언제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들이 가진 한계와 구상을 솔직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많은 기록관리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지시를 하는 기관이 아닌 소통을 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오래걸리고 귀찮은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기록원과 실무자와의 대립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현장에 기반한 국가기록관리의 발전도 힘들 것입니다.

- 기록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정하는 리더십과 역할이 필요하다.
- 현직의 기록인들 목소리를 들어주고 언제든 열린 자세로 소통하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록관리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기록 생산기관(지자체, 중앙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과의 소통 및 교류 강화 →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대한 현장중심의 전문성 강화 필요, 기록 생산단계와 활용단계(정보공개)까지의 통합 관리 주체로서의 국가기록원의 위상 강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지원
- 지난 10여년간 있었던 국가기록원이 일선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개인 및 그 기관에게 했던 기록관리 영역의 고압적인 갑질을 사과하고 과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기록계의 블랙리스트'를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 더불어 작성 및 지시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외국의 외교관들이 대통령에게 준 선물(행정박물로 추정되는)이 최순실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검찰의 발표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국가기록원은 대처하거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공공기록물 법이나 대통령 기록물법을 엄연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소하거나 조사가 없었는데, 관련자(전직대통령을 포함하여 업무관계자, 당사자)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기록물이 일개 개인에게 흘러들어간 경위와 이를 유출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을 개인에게 유출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벌칙) 부분에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기록공동체와 기록전문가의 역할

- 현장에 충실하면서 틀에 갇히기 보다 더 나은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록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 현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 제시
- 기록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자주 제기한 만큼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함
- 전문가 공동체로서의 개인적 조직적 역량과 소명의식 강화 적극적 참여
- 기록물관리의 학제적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평가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록물 생산체계와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이를 정부와 민간에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임 국가기록원장과 소통 강화, 행정적 마인드가 아닌 기록학적 마인드로 정부 기록물 업무 체계 마련 필요
- 국가기록원 욕하는 건 쉽습니다.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신 앞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욕하는건 기록공동체 스스로의 자존에 상처가 됩니다.
- 기록공동체와 기록전문가는 조직 및 국가의 기록 문화가 정착 및 발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기록전문가는 전문가 의식 및 지식을 갖추도록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 함
- 1. 공공기록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관리와 서비스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전문가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참여할 방법이 있으면 기록원의 각종위원회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비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된 기록정책을 현장중심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참여방법이 없으면 외부에서 리드하고, 후원해야한다.
-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지지와 견제. 실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
- 모든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부서를 조직해야 함. 타 부서에 소수직으로 있는 한 다른일에 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됨. 기록물 생산기관인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패는 국가전체의 기록관리 시스템 실패로 직결됨.
- 개방형직위 국가기록원장의 업무추진 적극 협조
- 국가기록원이 해야하는 수많은 과업들에 우선순위를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야 할 것입니다
- 국기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대한 적극적 의사개선-토론회. 연구모임등
- 국가기록원에 대한 부정적 비판보다는 기록물 관리의 변화를 위한 의견과 감시의 역할 필요
- 기록관리학의 위상은 법 제정 전보다 못한 상황임을 학계와 현장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연구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총무팀의 서브 인력으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계약직(2년 계약직,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폐기를 위한 3개월 아르바이트 채용 등)의 현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 기록공동체와 국가기록원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과 기록공동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정기적인 공동세미나 개최, 국가기록원 근무자의 기록공동체 파견)과 국가기록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평생 함께 해야만 기록관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함. 국가기록원은 모든 정책과 기조에 기록공동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없애야 하며 기록공동체는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다고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함. 상호 간에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수용하거나 협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이와 함께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록연구사들은 국가기록원에 대해 반감을 견고 기록원 내에서도 '일'하고 있는 기록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 국가기록원 기록전문가들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록연구사들이 힘든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를 다 하려고 노력함을 인정하고 현장업무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고압적인 자세를 없애야 함
- 다른 분야와 달리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집단으로서 가치와, 아직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공동체로서 다시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각기 기관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록관리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기록관리 직원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비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은 더욱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고 전문성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통합하고 조정해내야 한다.
- 변화에 발맞춰 사안마다 다양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자세와 대안에 대해 토론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현 공공기록물법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방향 제안
- 기록의 원칙과 기록 생산 현장의 조화 방안 모색

3. 신임 국가기록원장에게 바란다

- 1.기록관리전문요원의 업무환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제시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책임 재정비 3.정권의 성향보다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자세 4.학계 및 기록공동체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
- 기록관리 라는 일은 법도 표준도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한다. 결국 사람이다.
- 더는 쉬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 준 국가기록원의 모호한 정체성과 업무태만 등의 자세만이라도 잡아 주었으면 함.
-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공동체 내외부가 함께 기록원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정권에 굴하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전문직으로서 기록 윤리를 지키는 국가기록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록청으로 격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리더이길 바랍니다.) 2. 국가기록원의 질적, 양적 확대 (아직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들어가지 못한 공공기관도 많고, 기록물관리담당자를 파견직으로까지 뽑는 불법적 관행이 자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게다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뽑혀도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평가를 하지 않아 기록물관리가 아닌 일반직, 경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록관리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더 이상 기록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기록 관리의 중립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단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에 미충원된 전문요원 인력 확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독려 등
- 1.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아카이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독심이 필요합니다. 2. 성실하게 직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ARA의 경우 새로운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가 올 경우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개선과 혁신이 조직 역량의 핵심적 요소임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관리자의 정보가 직원에게 고르고 빠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파이프라인을 정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 국가기록원이라는 기관에 걸맞게 외적으로는 정치 중립을 지키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시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학계 및 기록공동체와 상호존중 및 협업하고, 내적으로는 전문가 기관으로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기록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1. 기록현장에 도움되지 않고 최초목적을 벗어나 필요없는 정책, 예를들어 기관평가나 생산현황보고등의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2.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실제로 설립하도록 후원해야 한다. 3. 공공기록물법을 현재의 행정현장과 기록 현황에 맞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
- 그간의 국가기록원 행태는 권력의 수발을 들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함

니다. 또한, 기록관리의 개념이 나온지 15년이 지났으나 기록관리는 행정계의 일부로서 무관심 혹은 미지의 영역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록관리체계의 운용은 오히려 기록관리가 행정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다거나 필요 없는, 혹은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인식은 후대 기록관리체계의 유지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록원 최초로 민간전문가가 영입되어 기대점과 우려점이 공존하는 상황임. 기대점은 이전 원장에 비해 기록관리를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혹시나 현장의 기록연구사의 상황을 잘 알아 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려점은 기록관리 부문에 전문가 일수는 있어도 관료시스템에 미숙할 우려가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조직내부 관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타 기관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타 기관 지휘관료들로 부터 무시당하기 쉬울 수 있다.
-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록관리업무의 선제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략 및 정책 수립 2. 기록관리 업무에 있어서 기록연구사의 동기부여 및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메카니즘과 업무루틴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깨어야 할 부분은 깨어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국가기록원의 역동성을 되살려내야 합니다.
- 국기원의 위상강화에 노력. 국기원 내부 연구사들의 연구활동지원및 바깥 활동 독려 현재 너무 폐쇄적이고 연구사들이 현장을 너무 모름. 각 기관의 지원. 기록전문가의 위상과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길....
- 국가기록원에 일반 행정직이나 사서직이 아닌 기록연구사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록물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행정직으로 일하는 국가기록원 직원과 통화할 경우 절망적이다. 일반 행정업무가 아닌 기록물 관리 영역의 업무에 전문성과 열정있는 기록연구사가 함께라면 좋겠다.
- 1. 법의 개정을 통해 기관별 1명 이상을 최소 2명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 기록관 설립 기관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경찰서, 소방서 등의 특수 기관에 기록연구사의 의무배치를 추진시켜 주십시오. 3. 기관들이 정규직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지원, 계도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신임 국가기록원장님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기록관리의 발전과 기록전문가들의 위상 정립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원장님들처럼 개인의 영달에 집중하여 무리한 정책 추진과 무책임한 책임 전가, 직원들의 의견 무시, 조직의 발전 무관심을 이제 그만 보았으면 합니다. 개방형인만큼 초대 개방형 원장님의 사명과 역할이 이후 오실 원장님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제발 '정치'보다 기록원의 미래를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곳, 말하기 좋은 곳, 연구하기 좋은 곳인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기록연구직들을 배출하고 이들이 국가기록원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직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정치에 눈이 어두운 몇몇이 기록관리를 망치지 않도록 먼 시각과 넓은 마음으로 직원들의 능력을 배가시켜주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 국가기록원은 어째서 국가정보원과 같은 업무 독립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명령만 내려지면 기록관리에 대한 개인적 소신과 상관없이 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기록전문관리요원과 국가기록원이 상위 권력층의 압력/회유에 굴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국가기록원은 아카이브입니다. 국가기록원장은 먼저 아카이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행정적인 위상을 넘어서 아카이브가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기록 중심의 아카이브를 지향할 수도 있고, 종이기록 기반의 전통적인 아카이브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록관의 역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록관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논쟁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논의 끝에 아카이브가 지향해야 할 바를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 원장으로서 기록전문가를 각 과장으로 임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바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 기록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현장마다의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는 주류 기록인과 비주류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사람을 키워내고 기록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가기록원장이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 기록관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다. 특히, 기록학 교육 현장의 열악함, 학문성의 붕괴에 국가기록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
- 제도와 현실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장 및 업무담당자의 인식 고취,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일선기관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과 소통을 하고 진행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여년간 있었던 많은 정책 중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행동을 가장 크게 규제한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표적으로 일선 기관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거나, 혹은 기록관리 현장의 관련 법, 표준, 지침을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집행했던 기관평가 제도를 폐지 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 표준을 준수하고 기록관리의 틀을 만들고자 했다는 최초의 의도는 사라지고, 지난 10년간의 정책 수립과 평가지표, 점수 측정, 결과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일선기관의 기록물관리영역에 대한 길들이

기 혹은 기관과 전문요원에 대한 갑질'이라 본다. 실효성도 없고, 업무에 도움되지 않으며, 오직 평가를 위한 평가로 사용되었던 정책을 폐지했으면 한다.

둘째, 근거와 집계 방식이 매우 어렵고 그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생산현황보고를 현재 '전자기록물을 위주로 생산하는 시스템과 환경'에 맞춰서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생산현황을 집계할 필요가 있는 중요 기관으로만 한정했으면 한다.

셋째,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과 앞으로 생겨날 업무의 해결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일선기관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하고, 문제점을 부인하고, 현실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 향후에는 일선 기관에서 원하는 부분과 실제 가능한 부분, 국가기록원의 정책을 일치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의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도에 있었던 세계기록총회는 일선기관에서 일하는 기록인들의 참여는 매우 적거나 부족했던 행사였다. 대표적으로 그 행사 전부터 참가비 부분에 대한 문의를 계속 했지만, 행사를 알리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당해연도에 갑자기 행사비 수백만원을 내고 참석토록 했다. 예산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편성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하는 행태를 하도 했다. 기록인의 행사에 정작 기록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이 주가 된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세계적인 기록관리 행사에 당해연도에 있으니 참여 바란다는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정보가 제한적인 일선기관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참여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 할 것인데, 1년전에 예산을 세워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담당자들의 인식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현장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모르고 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고려하지 않았다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갑질이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두가지가 혼합된 형태인 것 같다.

- 기록관리를 일종의 행사나 이벤트 영역으로 자꾸 만들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사 기록물을 찾는 것은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 뜬금없이 '새마을 관련 기록물을 찾으라'고 공문을 시행한 것은 정권과 최고위층에 잘 보이고자 했던 부분으로 생각된다. 진정 중요하고 계속 시행해야 할 업무라면 주도 면밀한 계획 수립과 홍보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의 각종 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기록관리업무를 좌우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전문성과 실효성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했던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에서 건의하거나 결정했다는 여러 정책들이 실제 현장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았다. 소속 위원회를 정말 전문성이 있고, 현장의 의견을 보고 들으려 하고, 국가기록원의 담당자 말고 일선 기관의 실제 업무담당자들과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국가기록원의 기관평가정책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만들고 ‘정책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책전문위원들중 현장의 기록관리 경험이 있거나, 상황을 심도있게 듣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위원들의 구성 면면을 보면 말 그대로 기록관리 정책과 평가 지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다.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현장과 동떨어진 의견과 지표로 일선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만 힘들게 했다고 본다. 기관평가를 하는 부서에 그 위원들과 현장의 전문요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게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번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기관평가가 기관의 업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정책전문위원회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둘째, 현장의 전문요원들과의 시각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한 토론과 의견 제기에 대한 공론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앨범은 ‘생산현황보고’의 [서식 9]에서는 시청각 기록물로 되어 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2014년도 만들어진 학교기록물관리 지침(NAK/G 9:2014(v1.0))을 만들 당시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은 ‘시청각 기록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표준화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에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행물’로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졸업앨범을 간행물로 간주한 표준화 지침이 발표되었다. 학교에 참고하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 불편한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졸업앨범이라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학교 사정상 매해 찍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사진 몇장을 촬영하는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우의 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책자형태의 앨범만 본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들었던 생각은, ‘국가기록원이 현장의 전문요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 또 갑질을 하는 건가?’ 였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거리가 먼 조직이 정책을 세우고, 그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현장과는 더 먼 거리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국가기록원 소속 위원회를 개방하거나, 위원회에 의견제시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바뀌어야 한다.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통하지 않는 조직을 바라보아야 하는 기록인들의 가슴은 답답하고 속은 타들어갈 뿐이다. 지난 10여년간의 과오를 고쳐서 향후에는 위원회가 말뿐인 위원회가 아닌 실제적인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고를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지난 시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밀실행정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학계나 단체들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당하는 등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현장을 힘들게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요소일 뿐이다.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 현재 시도 단위 지자체만 의무 설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립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시군구 지자체와 교육청은 권고 정도로 되어 있고, 시도단위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7개 시도에 최소한 지자체와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공사공단, 대학교등 기관 유형별로 2개 이상의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의 이관, 평가, 서비스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 보존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 복원 처리 등의 업무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물보존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보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을 제외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탈산처리를 해야 할 것, 수리 복원 절차를 거쳐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제한된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도 되지 않는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기록물 보존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존전문가가 각 지역마다 생겨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근무하면서 기록물보존관리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3개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기록물보존업무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육성 배치해야 한다. 기존에 문화재 복원 처리와 관련 된 부분이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거나 함께 협업하거나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기록관리를 교육하는 대학원이나 교육원에서 ‘보존●수리●복원’ 영역에서는 전혀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를 타개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정규모와 적정인력을 양성해내고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전반적인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 나가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4. 기타 의견

- 국가기록원이 관리기관으로서의 입지보다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했으면 합니다.
- 협회가 발빠르게 이런 토론회를 기획하고 실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저는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재직하면서 몇 년 동안이나 공문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적으나마 기록물 관리의 적정성 지표'를 반영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정보공개도 100점 중 0.14점만 차지하는 작은 지표여도 반영되어 있다는 자체 만으로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규를 만들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정보공개목록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체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있지 않은 곳은 아직도 기록물이 마대자루에 넣어져 창고에 방치되고 있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서업무, 정리업무, 차량관리, 운전직, 예식장관리 등 본연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는 곳이 허다합니다. 정규직보다는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시간선택제, 파견직으로 돌려집니다. 비상계획관처럼 채용 시 권장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선기관은 파견직으로 뽑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정보도 없기 때문이지요. 국가기록원에서는 그동안 법률 한 장을 첨부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뽑으라'는 공문 한 장을 보낸 것이 다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연1회 실시하던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실태조사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 500개가 넘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건 국가기록원의 의무방기입니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 표출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법은 있으나마나입니다. 법이 법다울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이 나서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 쓰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겠지만, 너무나 답답한 현실에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 1. 내셔널 아카이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읽고 조사, 연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다른 아카이브는 쉽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 연구직의 업무 재정립/재정의도 될 것입니다. 2.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면 합니다. 관료주의적 MOU 체결 등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수준에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소하게 보이지만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명칭 문제는 일상적 협력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3. 단지 학계에서 잘 알려진 교수가 아니라 실무에서부터 경험을 쌓은 진짜 전문가 기관장 필요합니다. 실무를 이해할 수 있어야 기관 미션과 업무의 균형을 알 수 있습니다. 4. 비록 개방형 직위라도 뉴욕공립도서관 등처럼 장기적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도 필요합니다. 5. 아카이브를 문화적인 기관으로 브랜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카이브는 여전히 '문서 창고'의 이미지입니다.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잘 살펴보고, 다른 문화기관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6. 민간의 작은 기록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내셔널 아카이브의 인프라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함께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국가기록원이 보다 혁신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이 힘을 써줬으면 함
- 국가기록원의 불통과 억압적인 정책, 행정에서 소외되는 극소수 전문요원등기록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의 첫 출발은 현장의 기록연구사에서 시작한다. 시스템 첫 단계에서 틀어져 버리면 전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
- 권력의 자리가 아닌 실무적인 관리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공무원 신입 교육시 꼭 기록물 관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인 기록관으로 업무해야하는 상황의 육체적 한계와 기록물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기록관리에 절말을 부른다. 공무원 시험 과목에 포함시키면 더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은 시험보면 공부한다.
- 이 상태로 있다가 국가기록은 허물만 남게 됩니다. 학계의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학문적인 발전을 실현시킬 현장과 현장의 인력입니다. 지금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취업과 업무 현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아십니까? 도서관계는 최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서의 배치기준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학 분야는 기록관들의 역할이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나서야 합니다. 나서 주십시오! 현 상황이 계속되면 기록연구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기관에 근무한다는 것은 무한한 자긍심과 기록전문가로서의 사명이 충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기록관리에 있어 중립적이지 못하고 정치에 이용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채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주기적으로 인식시켜주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연구하는 집단,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고일대로 고인 국가기록원 내부 조직원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순환, 어느 조직보다 권위적이고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강압적인 조직환경을 타파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기록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고민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보직을 세습하고 개인의 취향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이는 연구사들의 사기와 의욕 저하, 중간 관리직 이상의 줄타기, 이간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원장님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입 원장님은 분명히 인지하고 오셔야할 것 같습니다.
- 민간 출신의 원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록관리분야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반성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탄핵관련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현안은 제대로 전문성에 기반하여 처리된 것입니까? 공공기관의 기록을 민간위탁 할 수있도록 하는 정책은 바른 정책이었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록원은 그 동안 주요 현안에 있어서 기록공동체와 대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정원이 그러한 것처럼 기록원도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